

미국의 고등교육개혁

● ● ● 박 남 기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며, 미국 또한 고등교육 이수의 공급의 부족,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계층 간 격차 심화 및 비효율성의 문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약화 등과 관련하여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서는 미국 고등교육의 이러한 문제점들과 미국 사회가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행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고등교육개혁의 세기라고 할 만큼 전세계가 고등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교교육의 완성 단계인 고등교육이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문제는 유사한 면과 함께 차이점을 안고 있다. 먼저 각국의 고유한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국, 인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신흥시장국가는 급증하는 고등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학생들에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대학생을 직업으로 하는 젊은이가 늘어나 대학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 희망자 비율이 경제 상황에 비추어 충분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세계 각국이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공유하고 있는 목표도 있다. 치열해진 국제경쟁, 고등교육 질 보장, 고등교육 국제화, 대학교육 내용과 기업 및 사회 요구와의 상관도, 계층 간 고등교육 접근기회 등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자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계 고등교육의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한 과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미국의 고등교육개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국주의회고등교육위원회(State Legislatures' Blue Ribbon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2007)의 “미국의 고등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시스템은 더 이상 세계 최고가 아니다. 또한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지만 장학금과 등록금 용자프로그램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우려는 미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위기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미국 사회는 고등교육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원에서는 어떠한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지, 미국의 고등교육개혁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I. 미국 고등교육의 당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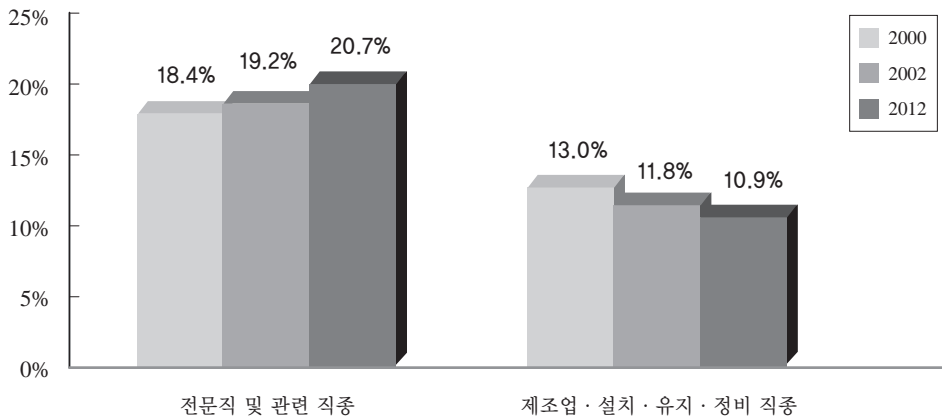
미국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고등교육 이수자 부족, 부담 적정성, 책무성, 국제화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State Legislatures' Blue Ribbon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2007;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0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1. 고등교육 이수자 공급 부족

미국 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미국 고등교육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 이수자에 비해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숫자가 너무 적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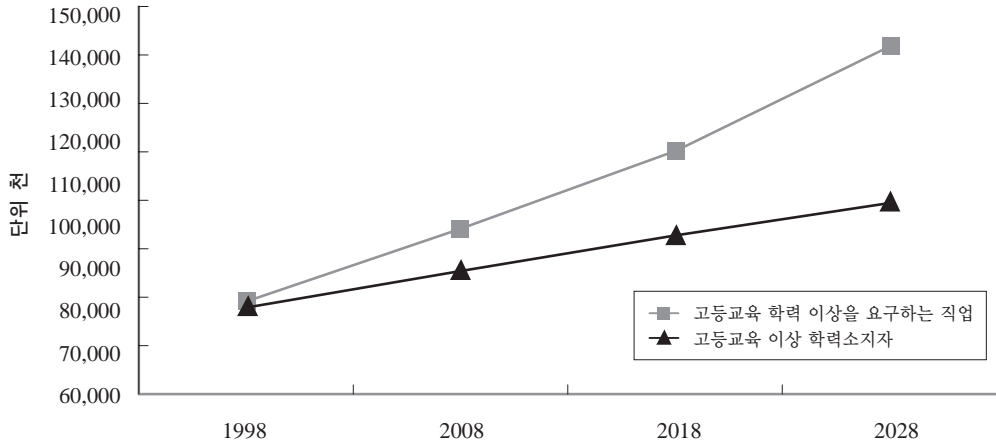
가. 대학 졸업생 인력 부족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대 이상의 전문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및 관련 직종 비율은 2000년 18.4%, 2002년 19.2%, 2012년 20.7%로 점차 높아지는 반면에, 제조업·설치·유지·정비 등의 단순직업 비율은 2000년 13.0%, 2002년 11.8%, 2012년 1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림 1] 전문능력 필요직종과 단순노무직종 비율(2000 ~ 2012년)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Census Bureau and National Alliance of Business.

[그림 2]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의 공급과 수요 예측(1998 ~ 2028년)

따라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대졸 이상 학력소지자의 증가 폭이 미미하여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현실자료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200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35~64세 인구 중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5~34세 인구의 대학 졸업자 비율은 캐나다, 일본, 한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에 이어 8위로 처져 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호주, 덴마크 등이 수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07).

나. 이공계 분야 교사공급 부족 심각

미국의 인력 부족은 힘든 것에 비해 사회적 보상이나 인식이 낮은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 공립대학들은 충분한 자질을 갖춘 간호사, 기술자, 과학자, 교사(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 외 경제 혁신에 중요한 다른 전문직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07).

다. 대학 신입생의 수학능력 부족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 수학능력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40%의 대학 신입생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학력보충 강좌를 수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 10억 불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2. 부담 적정성

가. 비싼 등록금과 비효율성

미국의 대학등록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고,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도 높아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01년도 현재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2,000불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그 결과 비싼 등록금을 대기 어려워 진학하지 못하는 미국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2005년 사이에 4년제 공립대학의 등록금 평균액은 인플레이션분을 제외하고도 51%나 인상되었다(사립대학은 36%가 인상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부채 수준은 공립학생이 15,500불, 사립대학이 19,400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금 증가율이 지난 20여 년의 기간 중에서 최하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나. 계층 간 격차의 심화

등록금이 비싸짐에 따라 계층 간 고등교육기회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현재 25~29세 미국인 중 백인 34%, 흑인 18%, 그리고 히스패닉은 10%만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04). 가계소득별 대학 진학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74,584불 이상인 경우는 88.8%가 대학진학을 한 반면, 25,064~47,405불인 경우는 68.2%, 25,064불 미만인 경우는 53.3%만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책무성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약화도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 졸업생의 직업수행능력

특히 졸업생의 직업수행능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공립대학 졸업생들이 창의력과 비판력, 문제해결력,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적 능력을 포함한 적용능력에 있어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07). 그리고 전국 성인 문해력 측정(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결과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일상문장 문해력에서 뛰어난 수준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10년 기간에 40%에서 3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아울러 대학 강의실이나 연구실에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신제품이 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나. 졸업률 저하

대학 수학능력 부족은 대학 진학을 꺼리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학 중도탈락률을 높이게 된다. 미국 대학생들의 졸업 비율은 54%에 그쳐 일본(91%), 아일랜드와 한국(83%)에 비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07).

다. 국제화

미국 대학들도 재계와 정계로부터 미국 대학들이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박남기, 2007). 미국 대학생들의 국제 역사나 지리,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식, 외국어능력 등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II. 연방정부의 고등교육개혁

미국 고등교육은 주정부의 책임이자 권리이다. 연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이나 융자, 연구비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방정부가 대학 평가인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에 연방정부가 내놓은 “고등교육을 위한 실천계획: 접근성 향상, 부담 적정성, 그리고 책무성 확보”에 연방정부가 바라보는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방향이 담겨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1. 접근성 향상

접근성이 낮은 이유의 하나로 고등학생의 수학능력이 낮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연방정부는 ① 유치원~12학년까지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변경, ② 대학생의 직업 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12학년까지의 국가 성적표 시험을 개선, ③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기회에 장애가 되는 성인 문맹문제를 사회가 인식하도록 각성, ④ 성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모형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연방정부차원의 연구 실시 등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서 보듯이 연방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2. 부담 적정성

접근성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 연방정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 학생을 위한 연방 무상지원 신청서를 학생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존의 소득과 세금자료를 주정부가 활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를 마치기 전에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추정치를 알려줌.
- 의회와 협력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을 만듦.
- 연방정부의 학생 지원시스템을 검토.
- 고등교육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개선기금(FIPSE)을 부활시킴.
- 대학연감을 만들어 내는 기관으로 하여금 부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도록 함.

실제로 연방정부는 2007년에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2007 대학 학비 감축 및 접근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향후 5년 간 페데럴 펠 그랜트(Federal Pell Grant) 기금을 114억 불 증액시키고, 1인당 최대 수혜액도 4,310불(2007년)에서 5,400불(2012년)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용에서 보듯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책무성 확보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대학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연계하고 자료를 공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평가인증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주정부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외부 접근이 차단된 40개의 고등교육 정보체제를 상호 연계시킴.
- 주와 대학이 학생학습 결과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
- 교육 수요자들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대학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대학 검색 홈페이지를 개선함.

나. 평가인증제 개선안

현행 평가인증제 하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실력이 직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 실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연방정부는 평가인증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 하에 주별로 흩어져 있고, 다양한 기관에 의해 다양한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인증에 대해 연방정부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2006년 3월 고등교육 미래위원회(Commission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위원장은 연방정부가 주별 평가인증기구를 없애고 연방차원의 평가인증기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인증기구는 대학, 기업, 산업체,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일반시민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반민반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인증기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엄격하고 투명한 전국 대학 질 평가기준을 만들고 관리.
- 기존 평가인증기구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인증기구와 절차를 감독.
- 대학이 재정 지원과 연방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인증정책 수립.
-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 결과를 사회에 공표.
- 운영비 확보에 필요한 기금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금 활용.

물론 즉각적인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미국 평가인증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시도가 서서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증기준에서 교육 결과를 더욱

중시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인증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방정부가 주최하는 평가인증기관들의 회의도 자주 개최하고 있다.

IV. 주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여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 주는 연방정부로부터의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정부의 고등교육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지사연합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07)는 “미국혁신: 고등교육을 위한 계약”을 통해 각 주가 나아가야 할 고등교육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국주의회고등교육위원회(State Legislatures’ Blue Ribbon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2007)도 “고등교육: 개혁 필요”라는 주제의 회의를 통해 주정부의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주정부의 고등교육개혁 기본방향

전국주의회고등교육위원회가 각 주의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건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건의 내용과 유사한 방향에서 지금까지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해왔고, 향후에도 이 건의에 따라 주정부차원의 고등교육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주정부는 고등교육 관련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라. 장기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자기 주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다른 주의 해결책을 차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향후 10~30년 기간 동안 주 인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라. 현재와 미래 학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지 않으면 주의 고등교육 목표를 의미 있게 세울 수 없다.
- 사회일반인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조직을 만들라. 현재의 고등교육체제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이 책무성을 갖도록 하라.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시켜야 한다.
- 재정 지원을 점검하라. 일부 주는 고등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주는 증액하고 있다. 모든 주는 보다 현명하게 재정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학생 지원을 점검하라. 능력과 필요기준 재정 지원프로그램이 등록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때에 졸업하는 학생에게 보상을 주며, 성인과 반일제 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학생들이 등록금 용자를 쉽게 받도록 하고, 빚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3명 중 2명은 평균 17,250불의 빚을 지고 있다. 주는 능력과 필요기준 장학금프로그램 간의 균형을 맞추고, 용자 인센티브제도나 용자금 면제프로그램을 고려하라.
- 대학 접근성을 높이라. 등록금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야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간

대에 강좌가 개설되게 하며, 기술학교나 전문대학 등 저비용 고등교육기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성공률을 높여라.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게 하는 것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졸업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혁신을 시도하라. 대학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동반자적 관계를 권장하라. 기업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라.
- 12학년을 개혁하라. 동시 등록과 조기 입학 프로그램은 학생이 대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성인 학습자를 배려하라. 이들은 적령 학생들과는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라. 대학이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2.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접근: 고등교육을 위한 주정부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계약

가. '계약'의 목적

고등교육개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정부가 강제력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미국 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주정부와 고등교육기관이 상호 계약을 맺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07). 이러한 '계약' 방식은 주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각 대학이 그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고등교육예산을 안정화시키고, 성취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며,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주정부와 대학의 의무

계약 설정과정에서 주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와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계약'에 명시된 목적 달성도에 따라 지원(혹은 제재)을 하기 위한 고등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대신 주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보고 의무를 줄이는 등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학이 최대한의 융통성을 가지고 계약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주정부와 대학이 역할과 목표에 대해 동의를 하면 '계약'을 강제할 방안인 책무성제도를 동시에 확정한다. 책무성 확보방안에는 투명성, 보상, 벌 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조치 등이 포함되게 된다. 계약 달성 여부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데, 대학과 주정부는 상호 동의한 고등교육 성과지표에 따라 학생의 교육 성과를 장기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다. 계약 우수사례

주정부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계약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개혁은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버니지가 주는 주립대학에 재정 운영과 물품 조달, 재정 지출, 정보기술, 인사 등의 제반행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와 주립대학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법안 「2005 고등교육재정과 행정 운영개혁법」을 2005년에 가결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대학은 주정부가 제시하는 강한 성취기준과 주차원의 목표 - 등록생 증원, 재학률과 졸업률 개선, 커뮤니티대학 졸업

〈표 1〉 고등교육 계약사례

요소	활동내역	우수사례
관계자 참여	계약 작성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할 관계자를 다음 집단으로부터 선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 총장과 일부 학장 • 공공이익: 주정부 고위직 • 이사회: 주와 대학의 이사 • 민간부분: 핵심기업 대표 	노스다코타(ND)-고등교육 원탁회의, 주 지도자(산업체, 고등교육기관, 정부)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가 주의 경제적 필요성과 고등교육을 상호 연계시킴
주정부의 요구 청취	자문단, 시장분석 등을 통해 경제적 필요성 파악 유사한 주와 비교함으로써 주의 고등교육 상황 이해	미네소타(MN)-주지사와 주의원이 주도하는 고등교육기구가 「미네소타 연감」이라고 불리는 기초 통계자료를 제작하여 교육과 경제 상황 파악
고등교육의 목적과 중요 임무 명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사 배출을 포함한 중요 역량과 혁신 가속화 등 고등교육의 임무, 우선순위, 주요 산출에 대한 합의	켄터키-주지사가 주관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 계약을 만들
주의 의무 명시	고등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 주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과 책임을 계약에 명시; 계약성과에 대한 적절한 장기 지원책 명시; 고등교육기관이 보다 유연해질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관료적이고 규제적인 요구 축소	버지니아-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물품 구입 및 자본 지출 등의 분야)을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시킨다는 법안을 2005년에 통과시킴. 단,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공동체 구성, 외부 기업체에 제공 등이 포함된 12개의 목표를 대학이 달성할 때에만 법안효력 발효
상호 책무성 체제 확립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상호 책무성 체제 확립: 투명성, 보상,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제재조치 등 포함.	캔자스-대학평의회가 대학 개선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고등교육기관이 협의하여 개발한 질 개선 핵심지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임. 주정부의 새로운 재정 지원은 핵심지표 달성에 대한 연말 평가 결과와 연계시킴. 캘리포니아-측정가능한 산출을 근거로 대학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시스템이 포함된 고등교육계약을 2004년에 만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수학과 과학 교사 배출을 75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기로 함.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대학은 공대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과 과학 교사 배출을 연간 2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함.
개별대학의 명확한 역할에 대한 합의 도출	대학 간 역할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전체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각 대학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고 합의를 이루어 냄.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나머지 대학들의 인력 배출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담함: 캘리포니아 시스템(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은 박사학위 수여권을 독점적으로 지니며 고등학교 졸업생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부생으로 받아들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은 석사학위 수여권을 가지며 고등학교 졸업생 중 상위 1/3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부생으로 받아들임. 전문대학 시스템은 모든 학생에게 문을 개방하고, 학점인정은 개별 대학과의 구체적인 협의에 따른다.

※ 자료 :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2007: 8-9).

생의 4년제 대학 편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된 체제 마련 등 - 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각 대학은 교육의 질 보장, 등록금 계획, 주 내부와 외부 학생 비율 및 학생 수용 증가계획, 학급 학교와의 관계 정립, 연구 지원 강화, 경제발전예의 적극적 참여 등의 항목이 포함된 구체적인 측정가능한 성취기준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직까지 그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분권화를 통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Walters, 2006).

V. 미국 고등교육개혁의 시사점

미국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낮은 대학 진학 비율,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수학능력 부족, 비싼 등록금, 너무 높은 1인당 교육비, 높은 중도 탈락자 등은 우리의 상황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근거자료에 터해 미래를 예측하며, 거기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대신이 있을 때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각 당의 정치적 이념에 근거하여 교육 관련 구체적인 대선공약을 내세우고, 만일 집권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 정책을 밀어붙임에 따라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되었던 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최근 모습이다. 이번만큼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너무 무책임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등교육정책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차근차근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 대학, 산업체,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고 추진은 정부가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
교육

참고문헌

- 박남기(2007), “박남기의 세계고등교육산책7: 미국 대학의 국제화 노력 시사점-경제수익 매달리기 보다 도움 줄 수 있어야” 2007. 8. 27. from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4533>.
- Bollag, B.(Aprin 14, 2006). Federal Panel floats plan to overhaul accreditation: College leaders decry replacing regional boards with a national system.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2(32), A1.
- 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of 2007.
- Contreras, A.(August 10, 2007). How Not to Fix Accreditation.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3(49), B16.
-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July 2007). *Innovation America: A compact for*

- postsecondary education*. Washington, D.C.: NGA Center for Best Practices.
- State Legislatures' Blue Ribbon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Jan 2007). *Higher education: In need of reform*.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Blue Ribbon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 The American Council of Trustees and Alumni(July 2007). *Why accreditation doesn't work and what policy makers can do about it*.
- U.S. Department of Education.(September 2006). *Action plan for higher education: Improving accessibility, affordability, and accountability*.
- Walters, A(June 23, 2006). Va. Overhaul May Offer Lessons.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2(42), A26.

박남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전공하였다(Ph D).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Korean higher education』, 『Guide to the successful thesis and dissertation』, 『교육전쟁론』, 『사립대를 통한 대학 평창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지도』외 다수가 있다.